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사회복지과】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4항(유사수당 지급 시 국가보조금 10%감액 가능 규정)에 근거하여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인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단계적으로 폐지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장수노인 정의 개정(안 제2조)
- 나. 지급대상 개정(안 제3조)
- 다. 지급기준 개정(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노인복지법」 제4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4항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16년 10월 31일 ~ 2016년 11월 17일(18일간)
- 나. 의견내용 : 추후 작성

8. 부서협의 결과

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없음

나. 규제개혁관련 협의 : 해당없음

9.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9(2015.08.13.)호

10. 관련부서 : 경기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192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 하남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만90세 이상인 사람이” 를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최 정 호
	팀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박 상 향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유 우 진 (790-5719)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192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u>지급기준일 현재 하남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u> 으로 한다. ② 지급 시기는 만 9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① (생략) ② 장수수당은 <u>만90세 이상인 사람이</u>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u>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u> ----- -----.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노인복지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474호, 2015.8.11., 타법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6.8.4.] [대통령령 제27389호, 2016.7.26., 일부개정]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9(2015.08.13.)호)

2

정비 대상

- '15.4~7월 실태조사(복지부·보사연) 결과 파악된, 지자체에서 국고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 (유사·중복) 연구용역 결과,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

<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업군 >

정비기준	사업수	예산 (억원)	유사중복 사업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74	393	· 기초연금	· 장수수당 등

< 사업군별 정비유형 >

사 업 군	정비유형	비고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폐지 권고	즉시폐지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 폐지* 추진

* (예시) 장수수당 지급기준을 연령이 아닌 출생연도로 변경